

배포일시

2025.5.22.(목)

담당자

황두영 조직팀장 (02-2070-3164)

민주당 ‘노동자 투표시간 미보장 사업장 제보센터’ 연다

- 공직선거법 상 사업주의 투표시간 보장 의무 있어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민주당 국민참여본부 한병도 총괄본부장 “국민 참정권 보장 위해 모든 조치 다 할 것”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본부장 한병도, 김교홍, 최민희)는 22일 ‘노동자 투표시간 미보장 사업장 제보센터’를 개소한다. 대선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30일이 목요일, 금요일로 모두 평일이라 투표할 시간이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우려에 대한 조치다. 21일 박찬대 총괄상임선대본부장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국민참여본부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신고해 해당 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의 연계한 문제제기 등 추가적 조치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참여센터 제보센터 외에도 노동본부 등 선대위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본부 한병도 총괄본부장은 “사전투표일이 모두 평일임을 감안했을 때 본투표일에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